

##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기업의 청정생산방식도입에 730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산업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방식(Cleaner Production)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개발 출연금 300억원, 청정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설비투자 융자금 4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산자부는 청정생산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1월 8일 정부에서 지원할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99년도 청정생산기술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청정생산은 생태계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 제품의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등 환경과 연계된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도국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청정생산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정생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청정생산 시설투자에 총 7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생산기술개발은 1월 8일 공고한 '99년도 청정생산기술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청정생산시설투자는 추후 공고할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지원하는데, 이번에 공고된 기술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업종 126개 기술의 개발 보급이 지원된다.

## 산업자원부, 기술담보시범사업 개선 방안 수립

산업자원부는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97.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술담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99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만큼 권리를 담보에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시범사업을 추진하여 '98. 12월말 현재 64개 중소기업에 137억원을 대출하였다.

'99년도에는 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액 및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담보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술담보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담보지원액을 '98년 200억원에서 '99년에는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담보 대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99.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자금을 기술담보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담보 대상자금을 산업기술개발융자금('99년 예산액 2,867억원) 및 산업기반자금('99년 예산액 3,620억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중 구조개선자금('99년 예산액 5,700억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취급은행의 기술담보 취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업체의 부도등으로 기술담보가 부실채권이 될 경우에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종전의 80%에서 90%로 확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금리를 종전의 1.0%에서 0.5%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기술담보 대출시 융자사업자의 대출기한을 1개월 추가로 연장해 주고, 기술담보 취급은행을 융자취급은행 전체로 확대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자원부에서는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담보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Non-IT 분야 Y2K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

본 자료는 '99. 1. 22 산업자원부에서 Y2K 관련회의 내용중 '99년도 Y2K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은 요점 정리하여 게재하는 것이므로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속적인 자문 및 지침제시를 통한 산업계의 문제해결 지원

- 산업계의 문제해결 대응체계 제시 및 홍보 (연중)
  - 기존 지침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업종별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산업계에 지속 전파
- Non-IT 실무대책반을 통해 문제해결 자문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연중)
  -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연구/도출
  - 아울러, Non-IT 대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및 문제해결 대응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수행
- 현장진단을 통한 업계의 문제해결 지원(연중)
  - 우선 국민생활 및 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 및 지도를 실시('99. 2월중)
    - 이를 위해, 산자부내 산업담당사무관,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99. 1. 22)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협회, 한전정보네트워크 등 전문기업(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
- 산업담당부서의 책임관리제 운영('99. 1)
  - 산업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소관분야의 문제해결 독려 및 홍보, 지원 추진
  - 관련업종별 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업계의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각종 회의시 문제해결을 독려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활성화 도모
  - 협력업체에 대한 문제해결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세무사찰면제, 여신우대금리적용 등)

### 2.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현장진단을 통한 업계의 문제해결 지원(연중)

○ 문제해결을 위한 소요자금 지원(연중)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계	비 고
기업 문제해결지원	264	300	564	정통부, 중기청
클리어링하우스 운영	2	3	5	중진공
진단·지도사업	68	168	236	공공근로사업
계	334	471	805	

\* '99년 조달 : 구조개선자금 103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00억원, 실업대책자금 168억원(자금활용실적에 따라 자금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3. 인증 및 진단·지도사업의 전개

기준의 점검항목으로 반영(현재 표준협회에서 준비작업 중)

- 인증제도(정보통신진흥협회)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Y2K 문제해결 활동 전개('99. 3)

4. 정보제공 및 협력활동 활성화

- 민간부문(Non-IT)의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기관 지정('99. 2)
-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에 문제해결 부진업체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및 협력업체의 문제해결을 확인토록하는 자발적 확인제도 추진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지원사업 전개('99. 3)
  - KS 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문제해결 진단/지도 사업 추진 검토
    - KS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정기심사 등)와 신규인증 등에 있어서 인증심사

- 인터넷을 통한 관련정보 제공 및 홍보/독려활동 강화(연중)
  - 산업자원부 전산시스템의 Y2K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정책, 문제해결지침, 추진상황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
  - 국내의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업체 및 관련정보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통해 산업계에 다각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 제시
  - 신속한 문제발생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시스템/부품목록과 정보교류 DB를 확대 구축 및 활용 활성화 도모
    - '99. 1월에 기초단계의 DB구축 및 2월 중 서비스
    - '99. 6월까지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발전
- 외국 시스템 공급사의 문제해결 지원 강화 (연중)
  - 업종별단체 등을 통해 파악된 외국 공급사의 미협조등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상무관·KOTRA·업종별 단체협력채널 등을 통해 지원요청
  - 정부기관 및 시스템 공급업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를 요청
  - 애로유형과 협조방안에 대하여 실무대책반을 통해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마련

\* 미국측에 대해서는 '98. 12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시스템공급사에게 우리측의 문제해결 지원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99년 3월에는 일본 통산성 및 외무성 등 정부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 5.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Tel : 500-2584, Fax : 507-2155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원 8,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금년도 신용보증예산 1조 2,000억원중 8,000억원을 조기 배정하여 신용정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99년도 신용보증지원 대책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주로 운전자금 조달에 활용되어온 일반보증금은 1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9% 증가한 규모이며,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부터 시행한 특별보증금 16조 3,000억원을 공

급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충분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신용보증지원은 벤처기업 등 기술·지식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대출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일

정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 보증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구상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국내외 조달정보망 서비스 실시

중소기업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입찰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국내외 조달정보망」을 인터넷상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였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공사발주 등의 입찰공고는 그동안 관보, 게시판, 일간지, 인터넷 등 그 수단이 매우 다양하여 정보수집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이들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출범이후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제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들 해외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해외의 조달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국방부, 조달청,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69개 공공기관의 입찰관련 정보와 해외 각 주재관들이 수집한 해외조달관련 정보를 제공할 「국내외조달정보망」(www.smba.go.kr/bid)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등 정보망은 공지사항, 자료실, 국내입찰정보, 해외입찰정보, 기업체정보,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지사항에는 국내외 입찰참가 방법이 자료실에는 입찰관련 법령과 입찰참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Down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입찰정보는 물품구매, 공사용역, 공사낙찰정보로 구분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입찰정보는 해외시장동향, 해외입찰정보 등으로 구성하여 각 국의 주재관들이 입수한 해외조달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체 정보에는 1,500여개의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8,600여개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동 정보는 '99년까지 10,000개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50,000여개 상품정보를 수록하여 중소기업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정보를 원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게 된다.

등 정보망에 자료입력 방법은 국내 조달정보의 경우 각 기관이 입찰공고와 동시에 각 기관에서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외 조달정보의

경우도 해외 각국의 주재관이 입수한 정보를 현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실시간의 살아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동 정보망은 '99년 1월 한달간 시험서비스를 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월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 정보

망이 구축됨으로써 중소기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는 물론 해외조달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어 국내의 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